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070-4211-6578 / 오종현 사무국장 010-7276-0922
제 목 [논평] 이제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날 짜 2020. 10. 16. (총 2 쪽)

논 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국민연금 강화 필요성과 과제는 이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해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